

■ 여수박람회 개최지 신항 일대 오염 심각

# 악취 진동 ... 퇴적층 제거 서둘러야

건설교통부가 남해수산업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 결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요 시설물이 들어서는 여수 신항 일대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람회 이후 여수를 해양관광 및 생태 환경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질 및 환경 저질=용역 결과, 여수 신항 내외부의 수질 오염도는 2~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항 내부로 접근할수록 수질 오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 세계박람회의 핵심 시설물인 'BIG O' 설치 예정지인 파제제(파도 저항 구조물) 및 북 방파제 수질이 3등급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질소(TN), 총인(TP),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함유량 등이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닷물 투명도도 2~2.5m로 부산 해운대 인근 해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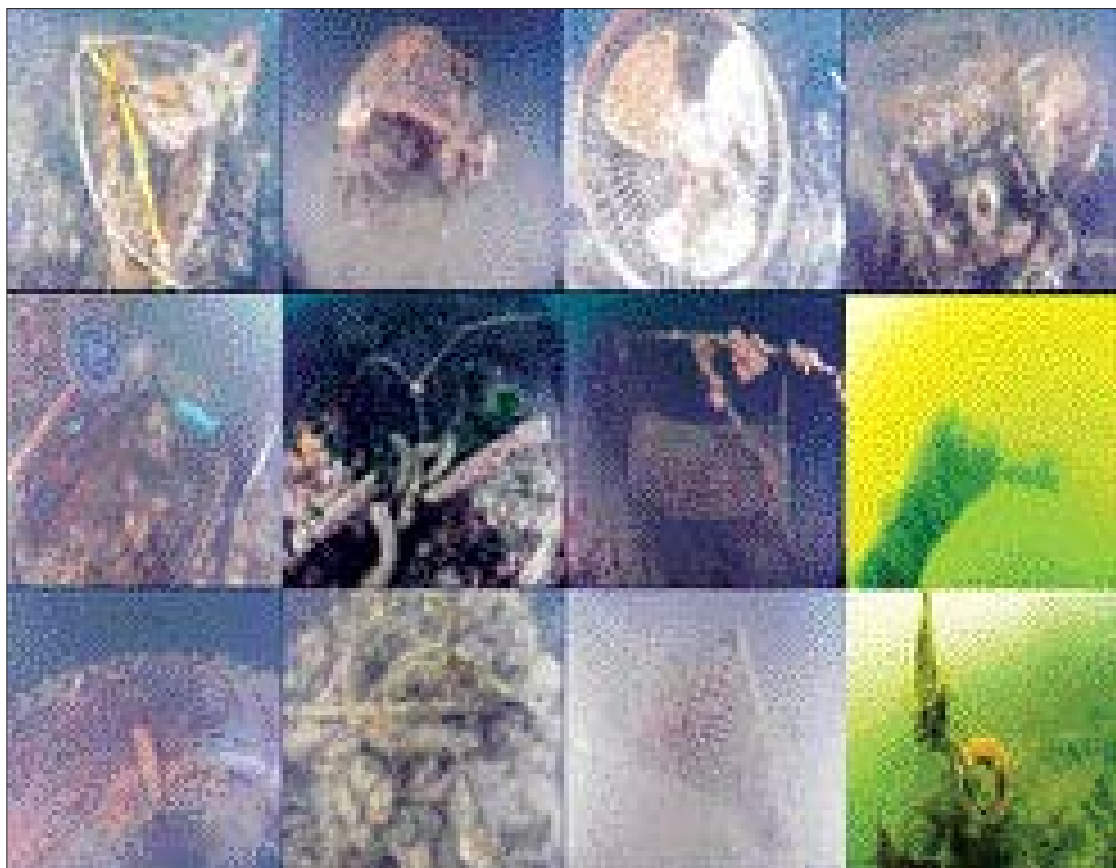
3등급은 해양 관광 및 여가 선용에 부적절한 수질이라는 점에서 'BIG O' 설치 이전에 대대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여수신항 인근 바닷속도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항 내부의 표층 퇴적물은 부패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표층 50cm 깊이까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및 기타 환경=여수 신항 부두 벽면을 중심으로 26종류, 약 70톤 가량의 폐기물이 투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항 내부의 유속도 5~9cm/s에 불과, 여수 연안의 평균 유속 60cm/s의 1/10 수준에 머무르면서 해양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충동 일대 생활 오폐수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해양 오염을 반영하듯, 여수 신항 인근의 해조류 분포도 6종, 3천 개체로 갖췄음(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암반이 백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문도 해역의 절반수준(9종, 6천8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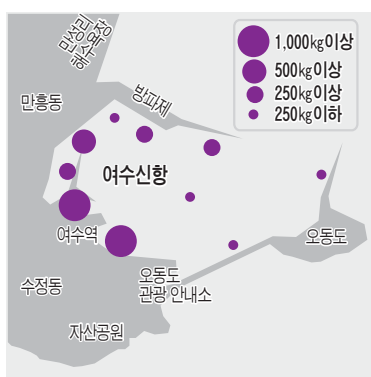


여수 신항 일대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해저에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 <국토부 제공>

### ■ 여수신항 해양 수질 측정 결과

구분	내항		외항		비고 (수질등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COD(mg/l)	1.39	2.14	1.06	1.23	1등급(1이하), 2등급(2이하), 3등급(3이하)
SS(mg/l)	18.8	41.2	21.6	30.8	1등급(10이하), 2등급(25이하), 3등급(기준없음)
T-N(mg/l)	0.352	0.602	0.370	0.420	1등급(0.30이하), 2등급(0.6이하), 3등급(1이하)
T-P(mg/l)	0.044	0.051	0.034	0.043	1등급(0.03이하), 2등급(0.05이하), 3등급(0.09이하)
투명도(m)	2.0	2.5	1.5	2.4	부산해운대 인근해역:4.3m

### ■ 여수신항 해양폐기물 실태 및 분포도



## 바닷물 투명도 2~2.5m내외 시계 불량

## 오염물질 차단·해수 유통 개선 등 시급

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항 내부의 어류의 다양성과 개체수도 신항 외부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대책=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남해수산업구소는 육상 오염물질 차단, 오염 퇴적층 제거, 방파제로 지장을 받고 있는 해수의 유통 개선 등 정부의 다각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에서는 여수 신항 인근의 해양 쓰레기 제거에 나설 계획이며 내년 용역을 한 차례 더 실시, 퇴적층 제거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박람회 이후에도 여수를 해양 관광 및 생태 환경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정부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 특위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여수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해양 수질 개선 캠페인 등도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도청 별관 철거문제 조기 매듭 짓겠다”

## 최 협 亞문화도시 조성위원장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을 조기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5일 제3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최 협(61) 전남대 교수는 “국책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성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의미가 밝혔다.

대통령 소속인 조성위는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사회각계에서 위촉된 당연직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최 위원장은 옛 도청별관 철거 논란과 관련, “이 문제 때문에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4개월여 동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5월 단체 등 당사자는 물론 광주 지역 원로, 시민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내 임기는 2년에 불과하지만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

인 만큼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시민 모두가 문화를 즐기는 한편, 도심 곳곳에서 문화의 향취가 배어나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광주 지역 문화·시민사회 등 각계의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게 조성위원장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경험을 살려 정부와 지역간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광주도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리모델링하는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콘텐츠 진흥원 광주유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의정비 얼마나 올리나” 초미 관심

## 광주·전남 자치단체 심의위 구성

## “경제위기 감안 재량권 활용해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도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면서 의정비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12일께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2명), 법조·언론계(2명), 시민사회단체(2명), 통장(2명), 시의회 의장 추천인사(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은 시의회 의정 활동 수준과 의정비 기준액(월정수당), 광주시 물가수준, 재정자립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구·북구의회도 지난 7일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다음주중 첫 회의를 개최하며, 서구·남구 의회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한다.

전남지역도 이미 13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비 인상·통결 수준 및 여론조사 실시 일정 등을 논의중이며 나머지 9개 시·군 의회도 다음주까지 의정비 책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는 특히 장기불황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지역 서민 경제가 위정거리고 있는 점을 고려, 월정수당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컨대 광주시원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216만원을 합한 5천16만원으로 현 의정비(4천231만원)에 비해 785만원(18.6%)인상된 금액. 하지만 심의위가 월정수당의 ±2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42만원(3.4% 인상)에서 최대 1천428만원(33.8% 인상)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심의위원들도 ‘재량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의회 의정비 인상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나설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자체 별로 다른 액수의 월정수당과 같은 액수의 의정활동비(광역의원 1천800만원, 기초의원 1천320만원)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김지윤기자 dok2000@

**호남권 미개설지역 창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성공창업특별장려

문의 1644-6288